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3년 6월 10일 (토)	조진영 노동안전보건담당 010-9913-9250 한상진 대변인 010-5584-4831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대표전화 (02)2670-9100 FAX (02)2635-1134		

“안전보건 차별을 멈춰라! 산안법 전면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확대 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2023년 6월 10일 토요일 14시
- 장소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앞 (집회 후 청계 광장으로 행진 후 마무리)
- 주최·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프로그램 (사회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담당 조진영)

본대회		
시간	내용	발언
-		사회자 : 총연맹
14:00	민중의례 / 입을 위한 행진곡	
14:05	여는말 : 산안법 현업고시 즉각 확대 및 노동부 규탄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14:15	투쟁사1: 안전한 학교 현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현업고시 확대 요구	- 공공운수노조 김영애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 노동안전위원장
14:30	현장발언1: 직종 확대 요구 (15분)	특수교육지도사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경 전국특수교육지도사분과장
		과학실무사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조선미 과학실무사 분과장
		사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차정녀 사서 분과장
14:45	문화 공연	- 이해규 문화일꾼
15:00	현장발언2: 직종 확대 요구 (10분)	수도검침 -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경기지역지부 부지부장 정지매
		방문간호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지자체분과장 구자연
15:10	결의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경숙 부분부장 - 서비스연맹 이현철 노동안전보건위원장·전국가전통신서비

		스노동조합 위원장
15:15	행진 준비 및 시작 -> 청계광장 (1km) 행진	- 국방행정 상담관 - 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인천소방지부장 서민기
마무리 집회		
15:45	연대사: 노동자의 건강권과 현업고시 적용의 필요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최민
15:50	투쟁사2: 공공행정 부분 지자체 노동자의 안전한 현장을 위한 현업고시 확대 요구	-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김만석위원장
16:00	구호 제창 마무리	

※ 붙임자료 : 현장 발언문, 투쟁결의문

[발언문]

① 공공운수노조 김영애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지만 일부 노동자들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에서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탄압할 때는 근거도 없는 <법치주의>를 운운하면서, 정작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법 적용 확대는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간호사인데 병원에서 일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받지만, 구청 보건소에서 일하면 일부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은 주차단속을 하면서 폭언과 폭력 등 감정노동에 시달리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위험한 유기용제를 다뤄 특수건강검진을 받는 과학실무사가 제외되기도 하고, 장애 학생을 지원하며 감정노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교육지도사도 제외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방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현업 직군인 급식·미화·시설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국방부 소속이라는 이유로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과거 공공기관 현업직군의 수가 많지 않았기에 법적용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1993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처음으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사업 등’ 현재까지 이어지는 제외 대상이 등장했습니다. 30년 전 지자체·국방부·학교 등의 모습을 상상하면, 특별법을 우선 적용받는 공무원 및 군인 등의 종사자가 대부분이고 민간인 신분의 공무원 노동자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화하고 역할이 세분화되면서 다양한 직군의 공무원 노동자가 늘어났고, 20년 전 만들어진 법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공공부문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적용확대를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산안법 개악 등 노동자의 생명안전법안의 후퇴와 개악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각 부처들과 지자체는 현업고시 적용대상이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아예 적용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현장 개선요구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이 아니라며 논의조차 거부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합니다. 30년 전 처음으로 등장했던, 구시대적인 시행령을 올해는 꼭 개정 해야 합니다. 공공행정과 교육서비스업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적용이 될 때까지 공공운수노조도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②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 노동안전위원장

전국에서 모여주신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노동안전위원장 김수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산재를 예방하고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산보위를 통해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와 대책들을 마련해 나갈 수 있게 논의창구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동지들 그런데 학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 모두에게 이 법이 적용되니까? 직업병, 산재보상제도, 직무 스트레스, 직장내 괴롭힘, 감정 노동 교육 받고 계십니까? 산보위에 참여하여 현장의 산재 위험요인을 찾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급식, 미화, 당직, 시설, 통학차량 업무만 현업업무에 포함시켜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과학실무사, 사서, 특수교육지도사, 수상안전요원은 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안전과 건강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차별을 받고 있고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논의 창구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현업 제외 직종은 산재 예방을 위한 각종 법령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직종입니까?

충격적이게 특수교육지도사의 근골질환률은 현업인 급식직종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과

학실무사는 각종 유해 화학약품을 다루고 있고 직업성 질병, 사고성 재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서는 장서를 관리하며 호흡기질환과 근골질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상 안전요원은 미끄러짐, 피부질환, 수질관리를 위한 화학약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학, 사서, 수상안전요원, 특수 모두 현업직종과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사고성 재해, 근골 질환, 직업성 질병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업에서 제외한다는 말입니까?

노동부는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요구하는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과연 그렇게 과한 것입니까? 법령도 아니고 고시를 바꾸면 되는 것을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때문에 학비노조는!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산안법 전면적용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교육서비스업, 공공행정의 모든 노동자에게 산안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차별을 두는 이런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데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과학실무사, 특수교육지도사, 사서, 수상안전요원을 현업에 포함하도록 현업 고시를 확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학비노조는 여기 모이신 동지들과 더 큰 투쟁으로 우리 조합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겠습니다.

③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경 전국특수교육지도사분과장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천안 늘해랑학교에서 특수교육실무원으로 일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특수교육지도사분과 전국분과장 박미경입니다.

우리 특수교육지도사는 학교에서 장애학생의 수업권을 위해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수교육지도사의 업무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등교하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학생이 교문을 들어서면 학생을 맞이해서 교실로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지원을 하고, 학생의 가방을 내려주고, 화장실에 데려가서 손을 씻겨주고, 수업지원을 하고, 식사지원을 하고, 또 학습지원을 하고 하교하는 시간까지 학생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학생의 최근 접 거리에서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중증중복복합 장애학생은 혼자 움직이기 어려워 특수교육지도사들의 도움이나 지원이 없으면 학교생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2010년에 입사해서부터 지금까지 특수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중증중복복합

장애 학생들의 교육학습권을 위해 학생의 수업뿐 아니라 학교에서의 모든 활동을 지원합니다. 특수교사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중증중복복합 장애학생들에게는 교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80% 이상입니다.

제가 올해 배치된 학급의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들로 직업 재활교육을 받는 전공과 학생들입니다. 뇌병변휠체어 장애학생을 지원하다보면 저는 식사를 제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도전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으면 저는 하루종일 긴장을 늦출 수가 없고 학생들이 하교하고 나서야 긴장이 풀려 녹초가 됩니다. 뇌병변장애학생의 수업지원을 위해 하루종일 휠체어를 밀다가 중증중복 자폐장애 학생의 학교활동도 지원하는 우리들은 하루종일 수많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 예로 작년에 제가 맡아 지원했던 학생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도전행동을 해서 저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맞아가며 근무해야 했습니다. 얼굴을 강타해 안경이 깨지고, 날아가고, 코뼈가 부러지고, 잇몸을 맞아 고름이 잡혀 쪼고 수술을 하고, 꼬집히고 물려서 타박상을 입거나 하는 일은 일상다반사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학생을 업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학생의 이동지원을 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휠체어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지도사는 디스크로 고통을 호소하고 무릎, 어깨, 허리 등 관절이 상해서 많은 특수교육지도사들이 근근히 치료받으며 근무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는 장애학생의 부모나 특수교육 관련 업 종사자라면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노동환경에서 일하는데도 근무를 하기 전이나 학기 중이라도 산업안전교육이나 산재예방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학교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원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우리 없이는 학교생활을 하루도 할 수 없다 보니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파도 쉽게 병가를 낼 수 없습니다.

실제 무릎 근육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한 특수교육지도사는 치료를 방학으로 미루었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수차례의 재수술을 거쳐 결국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특수교육지도사는 학생의 도전행동으로 코뼈가 주저앉아 수술을 하고도 지원인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출근을 해서 학생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 셀 수가 없이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들은 일하면서 다치고 병들고 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특수교육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참고 일했습니다. 그런 특수교육지도사들이 다치면 학교에서는 산재처리를 방해하고 학생의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하기도 합

니다. 그러면 우리는 산재처리를 포기하고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감당하면서까지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 직종이 생긴 지 거의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묵묵히 우리가 지원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잘 성장해서 학교를 졸업하는 날까지 학생의 성장 발전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참고 견뎌왔습니다.

장애학생도 비장애학생과 똑같이 수업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적 약자이기에 더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고 행복한 사회가 선진국 아닐까요? 사람은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특수교육지도사로 근무하면서 만약 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보다는 더 발전된 양질의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라서 어쩔 수 없이 시혜적으로 베푸는 교육이 아니라, 특수교육대상학생들도 당연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권리를 보장받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의 질이 보다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특수교육지도사도 특수교육의 한 축이며 협력자이자 동반자입니다. 특수교육지도사가 학교에서 계속 건강하게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건강과 안전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반드시 특수교육지원인력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대상으로 확대 고시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특수교육지도사도 산업재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어떻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지 교육받아야 하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노동부는 지금 당장 산안법 현업고시 확대하십시오! 투쟁!

④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조선미 과학실무사 분과장

안녕하십니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과학분과장 조선미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과학실무사로 34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과학실무사들이 언제부터 도입되었는지 아시나요?

1983년 학교에서 근무를 시작으로 올해로 41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직종인데도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 적용 직종이 아닙니다.

과학실무사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과학 실험 수업에 필요한 화학약품, 재료, 기구, 설비 등을 준비, 관리하고 실험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실험 중에 학생들의 실수로 발생하는 우발적인 사고도 대부분 과학실무사들이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하다보면 다치는 일도 있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 쉬는 시간 10분 안에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뜨거운 삼발이를 맨손으로 만져서 화상을 입기도 하고, 시약을 자주 맨손으로 만지다 보니 피부가 험고 습진도 생기고, 설거지를 하다 유리기구가 깨져서 찢리고 베이는 사고도 발생합니다.

무거운 실험기구 운반하는 과정에서 근골격 질환도 발생하고, 실험기구를 들고 옮기다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고, 바닥에 전기배선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포르말린 유출로 전교생이 대피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고, 수은 온도계가 부서져 수은 노출 사고가 있기도 했으며, 각종 약품 정리, 준비 심지어 폐수, 폐시약까지 처리 중 약품 흡입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실무사가 일하는 자료실에 각종 화학약품들이 있어 위험에 노출, 폭발, 화재 같은 대형 사고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불임, 생리불순 등 여러 직업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저도 15년 전 이산화탄소 발생장치 실험기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무마개에 유리관을 끼우다 깨지면서 손바닥에서 손등으로 유리관이 관통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는 산재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교육이나 산안법 전반에 대한 교육이 없어서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하였습니다.

다친 것도 속상한데 산재 신청도 할 수 없었다는 현실에 억울했습니다.

지금도 후유증으로 손이 저리기도 합니다.

과학실무사들이 각종 직업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위해 교육과 대책마련 논의 창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하여 과학실무사들이 산재에 시달리지 않게 예방을 위한 논의에 참가할 권리도 있습니다.

노동부는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실무사들에게 차별 없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즉각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차정녀 사서 분과장

안녕하십니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서분과장 차정녀입니다.

저는 2002년부터 올해로 21년째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만지며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는 한 학교에 1명씩 도서관 사서를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학교의 학생과 교사들의 수업을 위해 매 수업시간, 분기별, 학기별, 도서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부모님들과 독서 상담을 하는 1

인체제의 구조에서도 심지어 도서관 청소까지 하며 힘든 줄 모르고 일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자동대출반납기를 학교도서관에 비치하여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데에는 돈을 쓰려하지만 정작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처리들과 막대한 양의 도서를 정리하는 사서들의 업무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서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교는 기계가 대출반납을 다해주니 이제 사서 할 일이 없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부친상으로 5일동안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고 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책을 정리해보려 했는데 하루에 양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정리를 못하겠더라고요, 선생님”

코로나 시기에는 더 심했습니다. 책들을 일일이 소독해서 학급까지 배달하고 반납된 책들도 모두 소독기에 소독해야 했습니다. 서가 정리는 허리 숙여 맨밀 책장 정리를 시작으로 6단, 7단은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정리합니다. 현재 저도 다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벌써 10여년전 사다리에서 2, 3번 미끄러졌던게 세월이 지나 지금은 그 통증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때는 제 잘못이라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노동현장에서 누구하나 도와주는이 없이 혼자서 작업해야 했던 환경 속에서 이렇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못받아서 일어난 산재임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에 저는 앞으로는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사서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앞에 나와 호소합니다

학교도서관 사서 업무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감정노동, 호흡기질환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현업고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방조치가 없습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등에서도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도서관 사서의 업무 효율성,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가 반영되어야 하나 전혀 논의 절차가 없습니다.

유사업무인 도서관 사서 업무가 산업안전법 일부 적용제외 대상이 아님에도 학교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적용배제는 부당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부의 신속한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합니다.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업안전에 대한 교육은 어떤 노동현장에서나 다 똑같이 받아야 합니다.

도서 작업 중에 책이나 설비 등에 부딪치거나 떨어지는 위험 요인들로부터 사고성 재해를 예방하고 욕설과 폭언 등을 들었을때의 감정과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울수 있는데 예방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⑥ 수도권검침 노동자 -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경기지역지부 부지부장 정지매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경기지역지부 부지부장 정지매입니다. 현재 남양주시 시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맺고 시에 소속된 공무원 직원으로 수도 검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의 수도검침원은 37명 중 35명이 한달 평균 2100전을 담당하며 검침 시 계량기가 매설된 맨홀 진입, 공사 현장 진출입, 옥내 계량기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위적재된 철판에 끼임 등으로 작년 2022년도 업무상 산업재해 8건 이상과 개물림 2건, 2023년 5월 현재는 업무상 골절 산재 3건 개물림 1건으로 업무상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되고 있고, 검침 시 아파트 및 빌라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여야 하며 낮은 계량기 위치로 앉았다 일어났 도다를 수차례 반복으로 근골격계 이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야외 작업 시 문제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상재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게 없습니다. 제가 소속된 시청 산업보건 위원회에 수도검침원 노동자들의 안전화 및 안전용품 지급 안전으로 논의하자 안전을 보냈으나 시청 측은 현업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관련 사항이며 부서 자체 협의 사항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 고용노동부에 공공행정에서의 현업 종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수도검침원 안전을 위해 안전화 지급 해야한다는 질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안하겠다고는 아니라 안전하게 일하고 싶어 그에 관련 논의하여 안전하게 일 할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건데 왜 노동자 안전에 대하여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인 제가 고용노동부에 질의 답변을 받아 가며 요청하여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귀한 사람이고 귀한 노동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 기준을 다양한 직업,직군이 있음에도 여섯 개정도의 직군만 고시가 아니라 현업 종사자 고시 그 당시 누락 된 수도검침원을 다시 추가 하여 사용자에게 노동자들의 안전에 경각심과 노동자에 대한 보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의무 부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단 공공행정에서 뿐만아니라 직종과 규모에 관계 없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생명이 존중받고 보호받을수 있도록 우리 노동자들은 연대하며 투쟁하고 쟁취하여

하나.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산업 재해없는 안전한 일터

하나.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안전한일터

하나. 모든 노동자가 안전에 대하여 권리주장 하는 일터가 되도록 우리 모든 노동자가 더 가열차게 투쟁합시다.

⑦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지자체 분과장 구자연

안산시 방문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지자체분과장 구자연입니다. 방문간호사도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대상에 포함되어야합니다.

방문간호사는 산업안전보건에 있어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방문간호사는 노인 만성질환자, 기초수급자들의 합병증 예방관리나 건강악화 예방관리를 위해 매일 6~7가구를 대상자를 방문 관리합니다.

가구방문시 차량을 가지고 골목골목 가가호호 다니다보면 매일 영업사원만큼 운전을 하다 보니 이런저런 차량사고에 늘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지자체에서는 자차사고에 대한 변상 처리 대책은 전혀 없으며 단체보험으로 인적상해에 대한 얼마간의 보장만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상자 대부분이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다보니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고 애완견에게 물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개에 물려 광견병 주사나 치료를 받아도 자부담으로 처리해하는 경제적 부담도, 이후 발생할 수도 있을 후유증에 대한 대책은 전혀없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서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방문인력은 다양한 트라우마를 안고 업무를 지속해야하는 어려움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보건소로 의뢰된 대상자 첫 방문시 정보가 전혀 없이 방문하다 보면 결핵 등 전염병에 노출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몇년전 방문인력 13명이 결핵 검사했는데 그중 3명이 결핵 잠복기로 판정되어 3개월간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매일 약을 복용해야하는 고충도 고충이지만 3명의 방문간호사들은 업무중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독거 남성인 경우 간혹 성폭력이나 성추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늘 경계하며 방문을 해야하는 어려움 그리고 방문하는 대부분 가정이 노인가정이다 보니 청결 상태가 그닥 좋지 않아 장기간 업무를 지속하다 보면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나 피부질환으로 고생하는 방문인력이 많습니다.

최근 대상자가 준 음료를 한 모금 먹고 어지럼증이 있어 바로 밖으로 나와 119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몇 개월 후 그 대상자가 성폭행으로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합니다.

현장직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폭설이나 폭우등 기상이변이 생겨도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차량 접촉사고나 미끄럼 골절사고 등 다양한 산재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기상이변이 있을 때 딱히 방문을 하지 말라는 지침 조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6년 노동조합 차원에서 20명의 방문간호사를 조사했을 때 그 중 6명이 개물림, 교통사고, 폭력, 생명위협 등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는 매우 위험한데 법과 규정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실태를 조사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형식적인 안전 교육 실시 등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참고해서 꼭 현업고시가 확대되고 정비되기를 바랍니다.

⑧ 병영생활전문상담관지부 박철우 비대위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 병영생활전문상담관지부 박철우 비대위 부위원장입니다. 저희는 국방부에서 장병들의 복무 적응과 심리 안정, 자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입니다.

저희는 전국에 있는 군부대에 근무하며 장병들의 안위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을 합니다. 전문상담관이 담당하는 평균 장병의 수는 자그마치 943명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고위험군 위기상담이 대부분입니다. 고위험군 장병 중에는 주말 상관없이 하루에 여러 번 문자와 전화를 하고, 대꾸가 없으면 죽겠다고 호소하거나 매일같이 상담실 앞에서 전문상담관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런 장병들을 케어하는 것은 심리적, 정신적 소모가 매우 큰 일입니다.

또 자해나 분노가 극심한 장병과 상담하다가, 상담 도중에 극단적인 폭력성이나 폭언을 하는 경우 비록 저희가 전문가이긴 하나 겉으로 드러내지 못할 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 전문상담관들도 감정노동자입니다. 수많은 장병들과 만나고 대응하는 일들은 저희의 마음을 소모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런 소모로 인해 건강하게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 전문상담관들이 역으로 개인이 비용을 내고 상담을 받거나, PTSD 등으로 산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저희 전문상담관에 대한 처우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산안법에 보장된 권리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상담관에 대한 감정노동 보호와 관련 매뉴얼 작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에서 하는 얘기는 간단하고 허무합니다.

산안법 시행령에 의해 국방부에서 일하니 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다, 대상 사업장이 아니니 산안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딱 막힌 말만 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관들도 사람이고, 고위험군을 상대하는 산재의 위협에 처해있는 감정노동자입니다. 산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산안법 확대 적용을 미룰 수 없습니다.

이는 저희 전문상담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방부에는 저희 전문상담관뿐만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 동지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실제 위험물질을 다루기도 하고, 피약별에서 힘들게 노동하고 있습니다. 산안법 확대 적용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보호장치입니다. 국방부에

서 일한다고 산안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산안법 확대 적용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지부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인천소방지부장 서민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인천소방지부장 서민기입니다.

저는 오늘 영웅이라는 호칭 뒤에 감춰진 대한민국 소방관들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방관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이 24명, 부상자는 2,238명입니다. 평균 수명은 여전히 짧습니다.

건강이상자 비율은 전체 공무원의 3배 수준인 65%에 달하고,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6배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대한민국 소방관의 암울한 보건 안전 성적표입니다.

소방관들은 고정된 사업장이 없습니다. 모든 재난 현장이 우리의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어렵고 위험이 가중됩니다.

여기에 대해 소방청에서 내놓는 대책이라는 것이 기껏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부주의에 대해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전체적인 구조는 살피지 못하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공공행정 영역은 이 법의 적용에서 많은 부분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유해나 위험의 정도가 현저히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제도적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곳곳에 공무원이 있고, 항시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특히, 소방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간단하고도 명료합니다. 이 법이 모든 사업장에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당사자인 노동자가 머리를 맞대고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죽음의 행렬을 지휘하고 있는 실체를 밝히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소방관이 안전해야 시민의 건강과 안전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소방관의 안전이 대한민국의 안

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민주노총 동지들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더 안전한 대한민국, 더 안전한 노동현장을 만들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⑩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위원장 김만석

뜨거운 날씨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시는 동지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교육현장과 공공행정 현장의 많은 동지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노동하는 현실을 폭로하였습니다. 정부의 법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것을 여실히 느낍니다.

산재예방을 위해서 교육, 공공행정 모든 분야, 모든 업무의 노동자들에게 산안법은 전면 적용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대회 자리에서 나오지 않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할까 합니다.

우선, 산안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업무와 인원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이 틀을 허물어야 모든 노동자가 산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 노동자도 산재예방을 위한 산안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행정사무 업무는 매우 광범위 하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한 지자체에서 실시한 근골격 유해요인 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골병의 위험성이 현장업무 보다 행정사무 업무 노동자들이 더 높게 나온 것입니다. 정부는 이 결과에 담긴 의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곳을 지나시는 많은 시민분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사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정부의 산안법 현업고시 대상에 행정사무가 포함된다는 것은 모든 직종의 업무가 산안법 전체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노동자들에게도 산안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업무의 절반이 민간위탁입니다. 산재사망사고의 90%가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지자체는 산재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 해야 합니다.

현재 현업고시에 환경미화원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코로나 시기 많은 위험에 노출되었던 돌봄노동자들, 콜센터 노동자들, 환경미화 노동자들 정부는 필수노동으로 규정했지만 이분들을 지자체에서 대부분 민간위탁 간접고용 노동자들입니다. 고용도 불안, 임금도 불안한데 안전마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이라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강제해야 합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진리.

법으로는 이 원칙을 표방하면서도 각종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이 권리를 갈갈이 찢어발기는

현실을 이제는 바꿉시다.

우리가 집요하고 끈질겨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안법 현업고시를 개정하는 지금 시기를 놓치지 말고 투쟁해야겠습니다.

우리의 고시개정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안전 관점의 민낯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개정 결과 여하에 따라 민주노총의 윤석열 퇴진 투쟁에 있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개무시하는 정권이라는 중차대한 퇴진 이유가 추가될 것입니다.

[투쟁 결의문]

위험해도 되는 일터는 없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적용 확대 개정을 쟁취하자!**

매년 일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2,00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3만 명의 재해자가 발생한다. 재해가 다발하는 업종의 사업장이 있을지언정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은 없다. 변함없이 노동자들은 일터의 유해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떨어지고 끼이고 질병에 걸리고 있고, 올해 1분기에만 12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작년 윤석열 정권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기업 처벌을 완화하고 노동자 통제만 강화하는 식의 허울만 감축 대책인 후퇴안이었다. 연이어 노동시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생명과 안전에서의 개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며 일터의 안전을 후퇴시키고 있다.

노동부는 일터의 안전을 운운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논의하면서도, 정작 법에서 제외된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다. 법의 차별 적용으로 공공부문인 학교와 지자체 등의 노동자들은 안전교육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최소한의 안전 기준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를 규정하는 일부 적용제외 시행령은 몇 년째 유지되고 있다. 노동부는 2019년도부터 현업고시를 두어 일부 업무에 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같은 일터에서도 안전보건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수도검침 노동자가 맨홀 속에서 질식사 사망하고, 콜센터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후 공공행정으로 분류되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해체되고, 동일한 조리 업무임에도 국방행정이란 이유로 산안법에서 제외가 되고, 일하다 사고가 나도 산재보상제도에 대한 교육이 없어 산재보험 신청조차 몰라서 못하고 있는 현장 노동자들이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노동부가 법에서 제외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그동안 노동자들이 직접 증인이 되어 산업재해를 알려내고 업무의 위험성을 제기해왔지만, 정부는 현업고시 재검토 기간이 목 끝까지 차오르자 이제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생명안전 후퇴 개악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 시민의 안전이라는 책무를 되새기며 그동안 방치했던 구멍난 산업안전보건법부터 개정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노동부의 태만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현장 노동자의 투쟁으로 현업 고시 적용 확대를 반드시 쟁취해낼 것이다. 안전보건 차별에 맞선 투쟁으로 윤석열의 생명 안전 후퇴 개악 흐름을 하나씩 끊어내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의 최소한의 책무임을 똑똑히 새겨줄 것이다.

- 생명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 노동부는 안전 차별 말고 현업고시 즉각 확대하라!
- 모든 노동자에게 산안법 전면 적용하라!
- 안전할 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

2023년 6월 1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